

여야, 원구성 앞두고 법사위 살바싸움

법안 본회의의 상정 전 최종판문 정당 입장 반영하며 갈등 반복 여 "처리 지체 악습 끊어야" 야 "다수당 독주 막는 보루" 21대 국회서도 쟁탈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성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판문 격으로 '육상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능의 중복 뿐 아니라 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 위원장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보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이냐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결단력,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목을 잡고 거부물을 한다고 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 (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11일 T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원래 법사위원장 자리는 16대 국회 때까지는 여당이 가겠다"며 "(법사위를) 법안 처리를 지체시키는 데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17대 국회부터는 법사위원장이 제1야당 몫이 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는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과정에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중

중 말쑥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이상규 위원장이 한국당과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12월 31일에는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상정을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6시간 가까이 막아서는 바람에 예

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이상민 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법안에 대해 전자 결재를 하지 않아 안전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권에는 개혁추진에 발목을 잡는 적폐, 야당엔 다수당의 의회 독주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송갑석·이형석 '5·18 정책 토론회'

광주 당선자 8명 '1호 법안' 역사왜곡처벌법 공동발의키로

광주지역 4·15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1호 법안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과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인된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은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21대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위원장은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며 "철저한



송갑석 이형석

진상규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항쟁임을 모든 국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처벌을 위한 21대 국회의 실질적 입법과제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기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다음주 임시국회 소집 합의

여야가 오는 19~20일께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 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이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인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처벌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시민당 합당 가결...연동형비례제 손볼까

중앙위 98% 찬성...통합·한국당 합당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으로 유일하게 남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와 준연동형 비례제(연비제) 폐기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7명 가운데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 (486표), 반대 2% (11표)로 '민주·시민당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입기관 지정의 건'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합당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177석(지역구 163석·비례대표 14석)이 된다.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소수 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확정했다. 두 당선인은 원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각각 복귀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운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선출 직후 합당은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고 밝혔고, 한국당 원우철 대표는 이날 "합당은 반대

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합당 방법과 시기다. 한국당은 특히 합당 시기를 못박지 않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하는 "만 주머니"를 차려고 합당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원 대표는 그러나 "단 1초도 국고보조금이나 상임위원장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비례 위성정당 탄생 배경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면서 '여야 2+2 회담' 개최를 촉구했지만, 이를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걸지는 않겠다고 했다. 합당은 '형제정당'끼리의 문제, 준연동형 비례제(연비제) 폐기는 여야의 문제라는 게 한국당 논리다. 총선 이후 연비제를 없애겠다고 했던 공약을 이행하고, 통합당

과의 합당은 이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당과 합당한 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도 합쳐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연비제 보완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비제를 도입했지만,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서 애초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성정당이 경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고 결연적은 상황이 됐던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개정 방향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표의 비례성 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광주 이용빈·전남 김희재 원내부대표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이 되는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부대표는 김영배·이성만·허영·신영대·이용빈·이소영·강선우·홍성국·문진석·김희재·임호선 당선인이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선임 부대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중점과제 관리 등 중책을 분담할 것"이라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되면 추가 부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빈 김희재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 7,913,565,060원 최저가 : 4,431,597,000원(56%)
- 다세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이스트리
전용 : 176.4㎡(53.4평) 대지권 : 313.59㎡
감정가 : 559,000,000원 최저가 : 391,300,000원(70%)
- 다세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트라운하임
전용 : 243.2㎡(73.6평) 대지권 : 622.57㎡(188.3평)
감정가 : 960,000,000원 최저가 : 672,000,000원(70%)
- 아파트**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전용 : 125.95(38.1평) 대지권 : 71.37㎡(21.6평)
감정가 : 381,000,000원 최저가 : 266,700,000원(70%)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